



교사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'교육민주화선언'이 지난 10일 10도를 맞았다. 87년 7월 서울 홍제동성당에서 열린 대규모 교사집회.

96.5.13

## ‘교육민주화선언’ 10돌 교사운동 의미 되새겨

참여교사들 기념식...“교육개혁 실천” 다짐

지창은 기자

교육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‘교육민주화선언’이 나온 지 만 10주년을 맞았다.
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위원장 정해숙)은 지난 10일 저녁 6시 서강대 학생회관에서 당시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와, 뒤에서 이들 교사의 운동을 지원해 준 교수, 재야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뜻깊은 기념식을 가졌다.

참석자들은 ‘2천년대 교육과 교육운동’을 주제로 한 김찬국 상지대 총장의 기념강연 등에 이어 만찬을 갖고 선언 당시와 이후 교육운동을 회고했다. 5공 말기인 지난 86년 5월 10일 각계 각층의 민주화 열기가 높아 갈 무렵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은 80년 초반부터 민중교육지사건과 민주교육실천협의회, 기독교청년회중등교육자협의회 창립 등으로 성장해 온 교사운동을 대중적, 전국적 차원의 운동으로 이끌어 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.

당시 서울과 부산, 광주, 춘천지역의 교사 8백여명은 한국기독교청년회중등교육자협의회(당시 회장 윤영규) 주최로 각 지역에서 ‘제1회 교사의 날’ 집회를 갖고 ‘교육민주화선언’을 발표했다.

교사들은 선언에서 “교육 민주화는 민주사회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바탕이라는 자각에서, 민주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”면서 △교육의 정치적 중

립성 보장 △교육자치제 실현 △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△강요된 보충수업과 비인간적인 심야학습 철폐 등을 요구했다.

이 선언 직후 당시 문교부와 각 시·도교육위원회는 대책회의를 열어 참여교사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내리고 모임을 주도한 10여명의 교사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. 그러나 일선 교사와 학생, 시민·여성단체들의 열띤 지지와 징계철폐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자 교육당국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방침으로 물러섰다.

이후 이 운동은 강릉과 충청, 전북 등 전국으로 이어졌으며, 지역별로 ‘교육민주화실천 결의대회’ 등 대중집회를 열어 현직 교사들을 교육운동의 현장에 동참시켰다.

교사들은 이런 대중적 운동역량의 축적을 발판삼아 이듬해인 87년 9월 전국교사협의회를 만들고 이어 각 지역교사협의회를 잇달아 조직해 현전교조의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.

당시 서울 신일고 교사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던 이수호 서울사교육위원(전교조 서울시지부장)은 “사회 제반 분야의 민주화와 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관료성, 자주적인 교원단체 불허, 강요된 보충수업 등 교육 현실은 1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”며 “이런 의미에서 당시 교육민주화선언이 내걸었던 교육개혁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다”고 말했다.